

문 14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직장 민방위대 대원 甲이 재해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,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권으로 甲의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- ㄴ. 지역 민방위대 대원 乙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ㄷ. 민방위기술지원대 대원 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경우, 丙은 관할 읍·면·동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.
- ㄹ. 직장 민방위대 대원 丁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관할 읍·면·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.

- ① ㄱ
② ㄱ, ㄴ
③ ㄴ, ㄷ
④ ㄷ, ㄹ

문 15.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A군 B면에 ㉠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생기자 민방위를 위하여 ㉡ 필요한 응급조치가 취해졌다. 한편, ㉢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을 받은 지역 민방위대 대원 甲은 ㉣ 관혼상제(冠婚喪祭)를 이유로 동원을 미루고자 한다.

- ① 「통합방위법」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㉠에 해당한다.
- ② A군의 군수가 ㉡을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, B면의 면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접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- ③ B면의 면장은 관할 민방위 대장에게 ㉢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A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B면의 면장은 ㉣을 이유로 甲의 동원을 직권으로 미룰 수 있다.

문 18. 「민방위기본법」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본 계획은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,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② 집행 계획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본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,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③ 시·도계획은 시·도지사가 집행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, 시·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- ④ 시·군·구 계획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도계획에 따라 작성하고, 시·군·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
예비군법(시행령 포함)

문 19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원의 명부(名簿)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.
- ㄴ. 중대 규모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·운영할 수 없다.
- ㄷ.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·대대·중대·소대·분대로 편성하고, 연대·대대·중대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.
- ㄹ. 소속 기관장이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문서 송수신 체계에 따라 보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.

- ① ㄱ, ㄷ
- ② ㄴ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ㄴ, ㄷ, ㄹ